광주 동남구, 순천곡성 '통합·분리' 조정

광주·전남 선거구 재편 지역별 시나리오

총선 지역구 '246+7' 유력…전남만 1석 줄어들듯

장흥·강진·영암 쪼개져 고흥·보성, 무안·신안으로

내년 4월 총선의 지역구 수로 현재(246개)보다 7석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권역별 선거구 재편과 이에 따른 관심을 끄는 빅매치 선거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방안대로라면 광주는 8석으로 변함이 없고 전남은 11석에서 10석으로 1석이 줄어든다.

광주 선거구 수는 변함이 없지만 하한 인구 미달인 구도심의 동구는 재편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남구 일부가 분리돼 동구와 합쳐져 하나의 선거구를 만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남구 주민 일부가 강력 반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은 장흥·강진·영암이 쪼개져 고흥·보성, 무안·신안 등 주변 지역에 재편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장흥이 고흥·보성으로, 강진·영암이 무안·신안으로 각각 합구가 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또 인구 상한 초과로 순천·곡성에서 곡성이 분리돼 광양·구례와 합쳐지는 '조정'도 있을 전망이다.

이 선거구 획정안이 실행된다면 20일 현재 유권자의 관심을 끄는 선거구가 3~4개 나타난다.

우선 순천·곡성지역이 가장 주목해야 할 선거구 중 하나다. 이곳은 지난해 7·30 재보선 당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깃발을 꽂는 데 성공한 지역으로, 보수여당의 파란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의원은 당시 혼자 자전거를 타고 주민들과 만나는 선거운동을 하고 '예산폭탄'을 안기겠다는 파격 공약을 내세워 지역민심을 잡는 데 성공했다. 야권에선 노관규 전 순천시장, 서갑원 전 의원, 새정치연합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김광진 의원 등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광주 동구가 남구 일부와 합구가 될 경우 동구 현역 의원인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사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남구 현역 의원인 장병완 의원과 남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는 동구로 합쳐지지 않고 남은 남구에서 경쟁을 펼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합구된 선거구로 나설 경우 박 의원과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강진·영암이 무안·신안으로 합구될 경우는 현역인 황주홍 의원과 이윤석 의원의 대결이 흥미를 끌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강진·영암보다는 군세가 강한 무안·신안의 이 의원이 유리할 것이란 예상이 있지만 무안·신안에서는 서삼석 전 무안군수의 도전이 거센 상황이어서 표를 양분한다면 황 의원이 불리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외면 새누리당 김무성(왼쪽),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통과를 놓고 담판을 벌이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 공천 배제자 1월 중순 발표

평가위 이번주 채점 시작…내일 입장 발표

안철수 의원 탈당으로 인한 야권 신당 소용돌이 속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평가위)의 채점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20일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평가위는 그동안 여론조사를 제외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 자료 취합을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 본격점인 채점에 돌입한다.

평가위는 의정활동 및 공약이행 35%, 선거기여도 10%, 지역활동 10%, 다면평가 10%, 여론조사 35%의 비율의 평가 기준을 마련한 상태며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분야에서 100여개 세부 항목의 자료를 수집했다.

당초 주말(18~20일)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전망됐던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지역구 여론조사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평가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내년 1월 초순(10일 전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현행 당규상 공관위(공직후보자관리위원회)는 선거 100일 전인 1월 4일까지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평가위의 평가 작업이 1월 초순 마무리 된다는 점에서 하위 20% 공천 배제 결과는 1월 중순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의원이 공천배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다. 새정치연합에서는 평가위의 평가 결과를 공관위에 넘겨 공천 심사 진행 과정에서 자연스레 현역 국회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장은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여론조사와 관련, "여론조사 실시 시기까지 탈당하지 않았다면 여론조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오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평가위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安風 막아라" 與 연일 견제구

김무성 "탈당·분당 일으켜 정당사 누더기" 맹비난

새누리당은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으로 여권 지지층 일부가 이탈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안풍(安風)' 차단을 위해 안 의원에 연일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이념적으로는 중도·무당층, 연령으로는 젊은층의 이탈 조짐이 확연하다고 보고 이른바 안풍의 조기차단과 당의 실사구시 노선을 내년 4·13 총선 전략으로 삼을 방침이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20일 "최근 지도부 차원에서 여러 여론조사 전문가를 접촉, 안 의원 탈당으로 새누리당 지지율이 일부 잠식당했다는 조사 결과를 들었다"며 "중도층 유권자가 '안철수 신당'에 관심을 두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수도권과 젊은층 유권자 사이에서도 이탈 조짐이 감지됐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안 의원을 향해 비판적 발언을 날리는 것도 이 같은 정세 판단과 무관치 않다는 후문이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14일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탈당과 분당을 일으켜온 우리 정당사는 또 누더기가 되고 있다"고 안 의원과 문 대표를 동시에 겨냥했고,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이튿날 "'문재인 당', '안철수 당'을 위해서 민생과 경제 회생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바통을 이어받았다. /박지경기자 jkpark@

선구거 획정·쟁점법안 또 결렬

여야 2+2 회동…선거구 획정 직권상정 않기로 공감대

쟁점 법안, 오늘부터 상임위 가동 12월 국회내 처리키로

여야 지도부는 20일 내년 4월 20대 총선에 적용되는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또다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계속 논의키로 했지만, 추가 회동 날짜 등은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는 쟁점법안과 관련해 21일부터 관련 상임위를 가동,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유의동 원내대변인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이날 오후 3시15분부터 국회 귀빈 식당에서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이날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회동을 마친 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선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고 19대 국회도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서비스발전법·기업활력제고법·노동개혁법·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이 반드시 일괄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법안 통과에 대한 야당 협조를 당부했다"며 "양당은 법안 관련 양측 입장을 조율하고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내일부터 관련 상임위를 즉각 가동해 법안처리를 하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일부 쟁점법안의 독소조항을 제거해 단계적으로 '분리처리'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구획정 문제와 관련해선 여야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진전되지 못했지만, 여야 지도부 가운데 원 원내대표를 제외하곤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 쪽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성과를 내지 못해 죄송하다"며 "선거법은 계속 논의를 하기로 했고 원유철 대표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안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쟁점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내일부터 즉각 논의해 합의하는 것으로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총선 여론조사 표본 500명 넘어야 공표 허용

내년 4월 총선에서 선거구별 여론조사는 500명 이상을 표본으로 해야만 공표와 언론보도를 할 수 있게 됐다.

전국 단위 선거인 대통령선거는 1000명 이상, 광역시도 단체장 선거는 800명 이상, 세종특별시장과 기초단체장 선거는 500명 이상, 지방의원 선거는 300명 이상의 표본 수를 확보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개정, 오는 24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유권자의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구성 비율을 기준으로 한 여론조사 가중치 배율을 일정 기준(0.4~2.5) 내에서 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여론조사 기관 또는 의뢰 기관이 특정한 의도나 목표를 갖고 여론조사를 한다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3일부터 시행되며, 이 기준을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2016년도 IP-R&D 전략 지원 사업 상반기 시행 계획 공고

우리 기업에 맞춤형 · 밀착형 특허 전략을 지원하는 『2016년도 IP-R&D 전략지원 사업』 상반기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

1. 사업 목적

우리 기업이 핵심 · 원천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특허 전략을 지원하여 강한 특허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2.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소속 지재권전략전문가(PM)와 지재권분석 전문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기업에 맞춤형 · 밀착형 특허 전략 수립을 지원

3. 세부 사업

사 업 명	사업 내용	비고
글로벌 기술혁신IP 전략개발 (중견기업, 중견 후보기업)	성장 잠재력이 큰 중견기업 등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신제품 개발에서 해외진출까지 제품개발 전주기로 지원	추후 공고 예정
소멸특허 활용 전략지원 (중소기업)	글로벌 기업의 소멸된 원천 물질특허/플랫폼 기술 특허를 특허분쟁 우려 없이 제품 · 기술로 구현하기 위한 전략 컨설팅 제공	4-1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중소기업, 재창업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핵심 · 원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을 맞춤형 · 밀착형으로 지원	4-2

4-1. 소멸특허 활용 전략지원 사업

• 전략수립 절차

사업 추진 방향설정 (· 기업현황 파악 · 전략적 분석목표 설정) → 제품/기술 특허 · 환경 분석 (· 특허/논문 분석 · 환경 분석 · 권리 관계 분석) → 소멸특허 활용 & 대응 전략 수립 (· 소멸 · 후속특허 대응 전략수립 구체화 · 소멸특허 기반 제품/기술 구현 전략 · 특허 인프라 구축)

• 신청자격 :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 유형 및 규모

과제 유형	기간	지원규모	지 원 내 용
소멸특허 활용	20주 (5月)	0개	글로벌 기업의 소멸된 원천물질특허/플랫폼기술 특허를 활용하여 특허분쟁 우려 없이 신규 제품 · 기술로 구현하는 전략 지원

• 지원 조건(기업부담금) (단위: 백만원)

과제 유형	기업부담금				[참고] 협력기관 용역비
	소기업		중기업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소멸특허 활용	14	6	20	10	66

4-2.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 전략수립 절차

사업 추진 방향설정 (· 기업현황 파악 · 전략적 분석목표 설정) → 특허/환경 분석 (· 특허/논문 분석 · 환경 분석) → IP-R&D 전략수립 (· 핵심특허 대응 전략 · IP창출 전략 · R&D 방향 제시 · 특허 인프라 구축)

• 신청자격 :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소기업 또는 재창업 중소기업

• 지원 유형 및 규모

과제 유형		기간	지원규모	지 원 내 용
기술선도형		20주 (5月)	00개	개발제품 · 기술의 관련 분야 IP · 기술 · 시장 정보 분석을 통해 구체적 R&D방향, 핵심특허 선제대응, 강한 IP 선점 및 포트폴리오 구축, 라이센스 전략 등 종합적 IP-R&D 전략 지원
	계속과제	12주 (3月)	0개	기 지원 과제(5개월)에 대해 전략 이행 점검 및 R&D 추진 상황에 맞는 기술구체화 및 그에 따른 IP 권리화, 밸류-업, 해외시장 진출전략 등 보강전략 추가 제공
기술도약형		12주 (3月)	00개	선도사 및 경쟁사의 기술 및 IP 분석을 통해 핵심특허 선제대응, 회피 설계 등을 통한 R&D 방향 및 대응 IP 창출 전략 수립
IP 융복합	기업형	20주 (5月)	0개	제품 디자인 · 브랜드 · 특허의 병행 분석을 통해 기업의 CI, 제품 BI, PI 전략을 수립하여 제품의 특허와 디자인권이 융합된 IP확보 및 R&D 전략지원
	프랜차이즈형	12주 (3月)	0개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기업 등의 상표 · 서비스표, 특허권, 브랜드 · 비즈니스모델(BM), 제품 디자인 창출 등 전략지원

• 지원 조건(기업부담금) (단위: 백만원)

과제 유형		기업부담금						[참고] 협력기관 용역비
		영세기업		소기업		중기업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기술선도형		–	–	14	6	20	10	66
	계속과제	–	–	4	2	6	3	20
기술도약형		4	2	8	4	11	7	30
IP 융복합	기업형	–	–	17	7	23	13	68
	프랜차이즈형	4	2	8	4	11	7	30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5. 12. 16.(수)부터 2016. 1. 20.(수) 16시까지

• 신청방법: IP-R&D 사업관리시스템(ippro.kista.re.kr) 온라인 신청

6. 사업 추진 절차

기업 선정 평가 2016.1.21. ~ 1.29.	1차 서류평가 및 2차 발표평가 실시
기업 예비 선정 및 기업부담금 납부 2016.2.1. ~ 2.15.	기업부담금 중 현금 납부 완료 – 예비선정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
협력기관 선정 평가 2016.2.29. ~ 3.4.	• 선정방식: 공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최종 선정 및 계약 체결 2016.3.8. ~ 3.14.	• 기업부담금 납부 완료 기업에 한해 최종 선정 확정 • 전략원–참여기업–협력기관 3자 계약 체결
IP-R&D 전략수립 지원 2016.3.14. ~	• 기업 면담 및 분석을 통한 기업니즈 파악 후 과업내용 설정 • 착수 · 중간 · 최종 보고회 개최
사후관리	• 일정기간 사후관리 지원

※ 상기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사업설명회 개최

과제		지원규모	지 원 내 용
2015.12.22(화)	15:00 ~ 17:00	서울(강남구)	포스코 P&S 3층 이벤트홀
2016.01.05(화)		대구(북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5층 세미나실1
2016.01.07(목)		창원(의창구)	경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 318호
2016.01.08(금)		부산(해운대구)	벡스코 제 1전시장 216호
2016.01.12(화)		광주(북구)	광주테크노파크 201호
2016.01.12(화)		강원(원주)	강원산업경제진흥원 6층 소회의실
2016.01.14(목)		서울(구로구)	키콕스벤처센터 대회의실
2016.01.15(금)		대전(유성구)	대전 테크노파크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멀티미디어실

※ 참가신청: IP-R&D 사업관리시스템 (ippro.kista.re.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9. 사업 신청 관련 문의처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기업협력팀/창의혁신팀 (02-3287-4319, 4345, 4299)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kista 한국지식재산전략원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Agency · IP-R&D